

공약 한꺼번에 다 지키려 들지 말라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지난 대선 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대부분의 나라를 걱정하는(보수-우파라는 부당한 라벨을 묵묵히 견디는) 시민들은 좌불안석이었고, 개표 결과 박근혜후보가 승리하자,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연발했다. 좌파가 다시 집권한다면 북한 친화정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공포와, 국민 사이에 반목을 조장해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국민들 좌파집권 두려움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퍼주기'가 북한의 군비증강을 가능케 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진 것을 이명박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써서(돈을 안 퍼주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마치 그러므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이명박정권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들리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갖다 바치는 것은 물론 북한에서 밀고 내려온다 해도 대문을 열어젖히고 환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라가 마비 되건 말건, 국민의 생업이 어떤 지장을 받건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날이면 날마다 서울 도심이 촛불의 바다가 되게 한 세력이 집권 한다면 5년간 우리사회가 시위의 굶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 두려움이 50대 유권자의 90%를 투표장에 끌어내었다. 그리고 정말 천우신조로 나라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공약 환영받는것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무거워서 국민은 안쓰럽고 근심스럽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잃어버린 10년'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실정도 만만치

않는데 그 폐단을 다 바로잡아야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대선공약들이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당선인이 공약을 100% 모두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말아 줄 것을 바란다.

박후보가 신뢰의 정치인이

특별기고



서지문

·고려대 교수
·영문학

론이 비등해도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 이대통령이 얻은 것은 국민과의 불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도 다수 유권자가 설마 지켜지라, 하고 그를 뽑았고 실행되지 말아야했던

견해를 충분히 참작해서 모든 국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같은 공약에 힘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수정, 조절하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사실 부패만 확실히 몰아내어도 우리사회의 제반 문제가 바로잡아 지고 경제도 도약할 것이다.

대북관계·외교에 힘써야

그리고, 국민이 박당선인에 대해 가장 우려한 일이 인사에 관한 일이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국민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대통령이 인사를 온 국민과 의논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밀실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주 중요한 요직의 경우,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누가 대통령의 의중에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귀뜸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비공식 검증이 되고 국민의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물론 깔끔한 성격의 당선인이 의중에도 없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애꿎

은 사람이 '잡음'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요직 관리의 인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의 반응이 호의적인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사의 반이 아니겠는가.

박당선인은 인사도, 정책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깜짝 선물이 아님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된 일은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약 하나하나에 신경쓰고 집착하기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대북관계와 외교, 그리고 국민통합에 힘써서 그간 무수히 상처받고 부식당한 대한민국의 근본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데 진력해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K]

인사도 정책도 '깜짝선물' 아니다 여론따라 수정-조절 용기 보여야

부패만 몰아내도 모든 문제 잘 풀릴것

기 때문에 국민이 그를 선출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박후보의 공약을 전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박당선인은 개중에는 국민이 이런 공약은 실천하지 않았으면, 또는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공약도 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18대 대선 당시에 대다수 국민이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싫어했지만 이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 이후보가 모든 공약을 철저히 지키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찍지 않았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이 문제의 공약을 -4대강 사업으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기어코 실행한 것도 국민이 언젠가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고마워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이기도 했겠지만 반대여

공약임이 고통스럽게 입증되고 있다.

언론통한 인사검증 필요

아직 박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대운하'나 '수도이전' 같이 국민이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공약은 없는 것 같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력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수의 공약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실행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공약 축소나 수정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당선인의 말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모든 공약을 시행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무리라서 포기하는 것은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박당선인은 공약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실무자, 전문가의

군 복무 18개월 공약 철회돼야 한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은 지키지 않으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모두 지키려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승리로 끝나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여야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공약때문에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국민들의 '표심'과 직결된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욕망에서 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남발한 공약까지도 다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다가는 더 큰 실정(失政)을 초래해 국민을 도리어 괴롭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어렵사리 승리한 박근혜 후보로서도 선거열기가 냉각된 지금 차분히 생각하면 대선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엄청난 예산과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자신의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깊을 것이다.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매달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 두 가지만 따져보아도 우리의 재정형편상 과연(증세 없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리 휩쓸리면 안돼

이런 것이 바로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노령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에서 이 공약을 실행에 옮기자면 앞으로 5년간 적어도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분야의 공약들은 그래도 새 정부가 무리하게 밀고 가겠다면 못할 것도 없을 터이다. (물론 엄청난 후유증은 각오해야겠지만...)

그러나 공약중에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공약들이 있다.

국가의 존망과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 참전 언론인

2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발미가 되어 현 정부들어 2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그것을 다시 3개월이나 더 줄여서 18개월로 하자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적 논리'에 얽혀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약졸(弱卒)로 만들자는 주장의 다른 아니다.

우리 주변을 에

기치 못한 무력충돌로 국지전이라도 붙었을 경우에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일선에 배치된 병사들의 실전역량. 다시 말해서 병과별 장병들의 '숙련도' 문제인데 복무연한이 더 단축될 경우, 정밀무기에 적응할 만하면 제대(除隊)로 인해 군을 떠나야하니 전투력의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탱크나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고속함 등 고도의 정밀병기를 다루는 기계화 부대 장병들을 실전에서 싸울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키자면 18개월로는 대부족하다는 것이 훈련교관들의 설명이다. 미숙하기만한 초년병이 대당 50여억원짜리 탱크를 몰고 다니는 광경은 보기에 안쓰럽다는 얘기도.

군 현대화가 전제조건

또한 인적 병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군을 최첨단무기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막대한 국방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낙후된 대신에 대량살상용 중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거 개발한 데다가 핵병기까지 대량생산에 들어간 단계여서 우리와는 평면비교가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스테이티스퀴'(현상유지)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늘이기는 어렵겠으나 단 한달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곧 국방능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안보 자멸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연한 단축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야심적인 대선공약이기에 앞서서 보다 상위의 가치인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관점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4]

전투력 약화로 국난 자초할 우려 병력자원-첨단무기등 보강 필요

국민의 생존권이 담보되어 있는 안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깜짝공약'은 군사전문가들의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에 신경이 예민해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박근혜후보의 당초 공약목록엔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것이 대선투표 직전에 갑자기 발표되었으니 급조된 공약이나 다름이 없다. 병력기간 18개월 단축은 본래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박근혜후보는 이를 비판하는 쪽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병들의 복무연한을 더 이상 단축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얘기다. 젊은이들이 "군대가서 썩는다"는 표현을 곧잘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2002.12.8.)에

위산 복잡미묘한 안보환경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기간단축이나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방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때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드러난 육 해 공군의 군정과 군령의 혼선문제를 일사불란한 합동군 체제로의 개혁과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복무기간의 단축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제조건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첫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력자원 문제다.

육 해 공군 합쳐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의 병력은 병력감축계획으로 2020년까지 52만명으로 감축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복무기간까지 18개월로 줄어든 경우 52만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부족하다. 3만여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저출산 현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예

갈등을 '論' 하지 말라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이쯤해서 갈등의 뿌리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우리사회의 갈등의 시원은 지역감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요즘 들어 지역감정이란 말 보다 드센 어휘인 지역갈등이란 말들을 많이 쓴다. 되돌아보면 갈등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은 정치꾼들 때문이다. 그들이 득표

전략으로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지역 간 대립과 계층 간 대립을 부추겼고 그 결과 그들은 노렸던 집권이란 목적을 이루기도 했던 것이다. 역사와 나라의 미래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지역감정은 나무랄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 한다. 우

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뿐만 아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지역감정도 존재하고 같은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지방의 지역감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정서는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동서로 흐르는 잠베지 강을 경계로 해서 남북 간의 지역감정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엄존하는 지역감정이나 정서, 그 자체를 없앤다는 시도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다.

지역감정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은 감정이나 갈등이 존재하는 자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만 해법 찾

3면으로 이어집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갈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난 학자들, 잘난 척하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이 마구잡이로 갈등을 논하고 있다. 그 말들을 듣다보면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란 생각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들이 내세우는 갈등의 종류도 정말 많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종교갈등뿐만 아니다. 갈등이 끊임없는 세포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고부갈등, 부자갈등, 모녀갈등, 형제와 자매의 갈등, 선생과 학생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좀 더 있으면 고양이 기르는 사람과 개를 키우는 자의 갈등도 사회문제로 부상할 지도 모르겠다. 갈등이란 말을 들으면 인식하지 않던 사람들도 갈등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에 기분이 나빠진다.

복지공약 옥석-우선 순위 가려내야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가 걸려있다.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세계경제 위기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내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힘을 잃고 있는데도 성장보다 복지를 외치는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느새 복지천국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흔히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을 들지만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빈부결정은 경제제도가 핵심이고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이며 좋은 경제제도는 좋은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담벼락을 기준으로 갈라진 미국 애리조나 주의 노칼레스 시 주민과 멕시코 소노라 주 노칼레스 주민의 삶이 사뭇 다른 것과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유럽 등 반면교사

선거를 통해 집권자와 집권당을 선택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로 뽑히는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달으면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일찍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가 후퇴한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그렇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총선 때 자녀 교육수당·고교교육 무상화·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내 집권했지만 무리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결국 3년만에 대부분 포기하거나 수정했다.

영국은 2011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학생들의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3배로 올렸다. 스웨덴은 기초연금을 노인 전원에게 주다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이 낸 돈만큼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쳤다.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던 유럽 각국은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당선인은 많은 공약을 내놓

아 일일이 거론할 겨를은 없지만 공약 실천에 들어갈 돈은 연간 27조원, 5년간 135조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당초 추계했던 규모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시행한 2012년 첫해부터 서울의 구청장들이 재정과탄을 호소할 걸 생각한다면 무상보육 대

특별기고



류동길

·송실대 명예교수
·경제학

론 신용사회의 근본을 흔들 것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최고라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시급하고 대학까지 알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서두른다는 게

지키지 못했거나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100가지가 넘는 로드맵을 만들어 의욕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로드맵에 그친 것도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은 공약이 될 수 없는 공약이었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 박 당선인은 이제 더 큰 약속과 더 큰 신뢰를 쌓아야 할 대통령이다. 각종 공약을 쏟아냈던 대선 후보의 입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한다. 공약 뒷에 걸리면 국가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독야청청할 수 없는 한국이 먹고살 길이 어디 있는가도 따져야 한다. 나라 공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약을 합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세출구조조정과 세계개혁으로 복지예산을 충당한다는 건 분명 가능하지 않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용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개혁 발동 걸어야

아무리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또 약속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자원의 제약은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생활과 재정에 직결되는 공약은 우선 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에서 추진할 수 있게 기초를 닦아라. 공약을 핑개치거나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한국을 이 정도 수준에 오르도록 기초를 닦았다.

통 큰 복지는 통 큰 재정적자로 이어지거나 중요한 국가사업을 핑개치게 만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외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없다. 5년 안에 모든 걸 끝낼 건 아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대한민국은 영원히 뻗어나가야 한다.

국민은 정치개혁과 쇄신에 발동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우선 보고 싶은 것이다. [국문]

일단 시행하면 후퇴하기 어려워 5년안에 모두 끝내려 해선 안돼

상을 0~5세로 확대하는 경우 부담증가는 당연할 것이다.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11%에서 2020년 15.6%, 2040년에는 40%로 늘어난다. 세금 낼 생산연령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재정 건전성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재벌 회장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금의 2배인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지급대상을 선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는데 들어갈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다.

개인빚 갚아줘선 안돼

4대 중증 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100%보장은 어떤가. 그동안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100% 보장을 하는 경우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고 예상한 재정부담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건 개인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은 물론

얼마나 허황한 일인가. 그런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써야 마땅하다.

포퓰리즘의 극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라면서 택시법까지 만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성급했다. 10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후보-대통령입장 달라야

복지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면 후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수혜자에게는 그게 일종의 권리가 된다. 누가 권리를 빼앗기겠다고 하겠는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급조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정을 잘 행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쏟는 것이 국정을 잘 행하는 것이다.

1992년 대선 때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큰소리친 김영삼 후보와 1997년 내각제를 하겠다고 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 공약을

2면에서 이어집니다.

기가 가능할 것이다.

인사문제를 예로 든다면 지역안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고려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적재적소의 인물을 뽑아 쓰는 원칙을 세워나가면 점차적인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특정 지역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능력과 관계없이 그 고장 사람을 발탁했던 것 같은 과거의 일들이 문제를 더 어렵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지역감정에 편승한 부당한 봐주기와 줄 대기 인사가 문제인 것이다. 순수한 지역감정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타향에서 만난 고향사람이 반가운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특히 언론에서 인사결과를 보도하면서 도표로 분석하고 지역 출신을 비교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갈등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존재하는 것까지 갈등은 사회와 국가가 안고 견디며 면역도 기르고 해법도 찾아 낼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국민 교육이 뒷받침돼야 할 일이다.

너무 전문가적인 양식을 들먹이며 갈등을 들쭉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치적 방편이나 철학적 가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잡은 언급은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굵어 부스럼이란 말도 있다. 가렵다고

긁으면 상처가 덧난다는 깨우침이 필요한 시국인 것 같다. 갈등을 「論」하지 말라고, 그게 갈등을 줄이는 비법이라는 제안을 해본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라고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도 바로 알아야 한다. 소통과 마찬가지로 갈등해소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 될 수 있는 일이다. [국문]

문화부 장관 국격맞는 인물 선택을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안을 놓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고 그런 만큼 함께 노력해 극복할 사안일 게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 개편의 칼자루를 비켜나갔다. 부처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늘어나지도, 쪼개지지도 않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앞날은 일단 무사하고 평탄해 보인다.

하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문화 영역은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했다. 문화는 득표와 별로 상관이 없어서인지, 정치개혁이나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등의 담론에 가려진 측면이 많았다. 이 점에서는 사실상 여야가 대동소이했다. 물론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임기 내 문화 관련 예산도 현재의 1.14%에서 2%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능력과 당선인의 약속정치 가운데 막상 어느 쪽이 우세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문화부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지도 않았고, 화려하게 새 출발할 입장도 아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박근혜 정부는 문화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무언가 다른 부처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 문화부와 어딘가 달라져

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지역별, 계층별, 혹은 세대별로 크게 갈라져 있다. 그러한 분열의 정점을 차지하는 것이 소위 이념갈등인데, 겉으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결 혹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립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나라한 이익쟁탈이나 이권(利權)투쟁일 공산이 높다. 정권교체가 몇 차례 진행되는 동안 양쪽 모두 기득권의 달콤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들을 되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이념갈등의 진원지가 문화부일 때가 많았다. 문화부가 정권의 흥위병이 되고 문화가 권력의 전리품이 되는 일이 민주화 이후 비일비재했다. 이른바 '코드 인사'와 편중

특별기고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회학

예산이 그 대표적 보기다. 하긴 좌우와 정부를 막론하고 집권 과정에 서부터 문화의 힘은 엄청 막강해졌다. 언필칭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스스로 권력의 도구나 수단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부장관은 시나브로 문화와 권력의 유착을 상징하는 자리가 된 듯하다. 만

약 박근혜 새 대통령마저 이런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자신이 맹세한 국민대통합이나 '100% 대한민국'은 이미 물을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국민적 공감과 소통, 그리고 화합을 향한 당선인의 의지는 그 진정성이 일차적으로 문화부장관 인선에서 평가될 참이다. 문화부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속내를 예단하는 '각료의 얼굴'이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십 명 썩의 장관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문화부장관은 '나라의 얼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부장관의 수준이 나라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말해준다는 의미다. 매년 프랑스

의 앙드레 말로나 그리스의 엘리나 메르쿠리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문화부장관은 그 자체가 국가 브랜드이자 소프트파워로 통하는 것이 선진국의 전통이자 자부심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경우처럼 정치적 흥행사(興行師)들이 졸지에 문화정책을 관장하게 되는 광경을 그곳에서는 찾기 어렵다.

요즘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거명하는 인물들 가운데 인격과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선거 과정을 함께 했던 좁은 인재 풀을 과감히 벗어나 고품격 '르네상스맨'(Renaissance Man)을 보다 멀리서 찾아 나서길 권유한다. 그것이 당장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신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확실히 올라서려면 문화부장관 자리를 다소 특별히 예우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국력을 넘어서 국격(國格) 단계에 이르면 국가 간 우열과 승부는 문화에서 갈린다. 1959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만들었다.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에게 인류의 예술적 자산에 근접"시키는 일을 소관 업무로 규정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도 이제는 그 정도의 비전으로 문화부를 이끌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좌편향 포퓰리즘 교육 바로 잡아야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온 국민은 기원한다. 1997년 IMF 관리체제 편입으로 국가 부도를 낸 YS부터 MB까지 4 정권이 부패·부정·무능·실정·분열·갈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실패한 정부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20세기말 21세기초 2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신천지를 여는 새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돼 양극화·부조리 노정과 국가부채·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렀던 YS·DJ·노무현·MB 정권의 경제정책 모순 극복과 구시대 질곡을 벗어나는 탈바꿈도 기대한다. 새 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을 뛰어넘어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 정권들의 권력 구조 모순·무지·악습과 단절하는 대전환의 결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18대 대선의 경고를 박당선인과 국민은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하

나로 묶는 시대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새정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영화에 많은 관객이 몰렸으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한 '100년전쟁'이 인터넷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건양대 대우교수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권력에게는 동정심을 갖게 하는 전교조의 종북자 학사관 교육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YS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김대중 정부의 전교조합법화·MB 정부의 전교조와 동거로 교육과 문화는 정치 도구화되고 국가 정체성과 교육이

박 정부에서 쏠아 터져 학교교육은 파괴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교육 문화 혼란을 바로 잡았어야 할 MB정부의 5년간 허송세월로 공교육은 파산되었고, 20~30대의 현대사 왜곡 인식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MB 정부와 차별화된 교육 문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사를 자학시(自虐視)했던 지난 20년의 국가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새정부는 국가이념·통치철학·역사의식·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은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부끄러운 역사였다"고 잘못 배운 20~40대에게 대한민국사의 실상을 인식하게 할 실증 자료를 공개해 북한과 종북 세력의 거짓 선전 선동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종북세력의 거짓 선전-선동 차단 교육감 선출 공모제 도입할 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반감을, 건국 방해 세력에게는 호감을, 북한

넘은 실종됐다. 김대중 노무현 좌경정권에서 자리잡은 전교조 교육이 이명

5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한 법치’로 불법-반칙 차단 시급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전제자(專制者)에게 굴레를 씌워 권력을 빼앗아오는 수백년 간의 과정을 가졌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 권리와 책임을 키우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法治)다. 그러나 동양의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단기간에 수입된 것이라 아직 제왕시대의 ‘왕도(王道)사상’에 길들여있다. 곧,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 ‘좋은 민주주의’도 만들고 ‘국민통합’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인치(人治)다.

왕도정치는 왕이 백성의 주인이던 시대의 유물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이 대통령 이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치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말로는 법치를 외쳤지만 실상 범죄자를 사면하고, 신용불량자를 구제대출해주고, 약자의 불법을 용인해주고 특정집단, 특정지역에 선물을 나눠주는 정치에만 골몰해왔고 국민도 이것에 매달린다.

이 제왕정치가 곧 ‘좌파적 시혜(施惠)정치’다. 이 경향은 경제위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며 이런 시혜경쟁의 결정판이 된 것이 지난 대선이었다. 우리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국민통합정치’도 아마 이런 것 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합’은 지도자의 이른바 탕평(蕩平)정치나 대화, 타협, 관용 같은 것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과거 대화와 타협은 ‘법과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시민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과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통합은 오히려 수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을 희생자로 만들어 중국에 더 큰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놈의 헌법” “정당하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화 타협 관용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라고 말해왔는데 이후 국민 분열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다음, 국민간의 갈등은 세계 어디서

나 존재하며 이는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 정치로는 절대로 해소 불가능함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를 확대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로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소’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전교조, 덕수궁 텐트장의 각종 불법 파업자와 농성자, 언론의 조작자인 문화방송(MBC)파업자 등 불법과 선동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수행의 도구로 삼으려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해 우리사회 법치와 공권력의 권위가 세워질 수

은 오히려 서민을 상습적 범죄자로 기르는 길이다. 서민 약자라고 법치를 풀어주면 생계형 범죄는 서민의 권리가 된다. 범죄자는 범죄자를 기르며 서민범죄자는 서민을 등쳐먹는다. 서민은 우리 사회 법의식, 법치사회를 만드는 기층(基層)이다. 이들이 범법자가 되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범무시하는 자가 뽐히게 될 것이다. 서민과 약자일수록 법치를 가르쳐 그와 자손을 정직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이롭고 정의로운 길일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자신이 법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과거 임금님이 베푸던 사면령(赦免令)과 같은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없고, 누구에게나 법이 적용되는’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면받는 자도 사면하는 자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단지 아주 숭고하고 불가피한 사연이 있을 경우 최소로 행사됨이 마땅하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대통령들이 총 709명을 사면했으나 그때마다 논란이 들끓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들은 제왕처럼 사면잔치를 벌여왔다. 필자가 집계해보니 김영삼 정부는 총 704만명, 김대중 정부는 1038만명, 노무현 정부는 438만명,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15 사면까지 재벌기업회장, 정치인, 농어민, 서민, 자영업자, 음주운전자 등 총 467만명을 사면했다. 4명 대통령이 17년간 2650만명을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범법자, 사면대상자가 되는 나라가 어떻게 법치국가인가. 대통령의 사면은 분명히 그가 지키기로 선서한 법치를 찢는 행위다. 대통령이 법 위에 서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법을 내세울 유혹을 받을 것이다. 야당, 민노총, 시민단체와 전교조의 막무가내 독선이 언제부터 극심했는가?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같은 통치자 사면행위를 일체 없앤다면 국민은 정권의 편이 될 것이다. [4]

國基 흔들는 중복세력 관용 안돼 생계형 범죄 사면도 신중할 필요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이 절차에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으로 참여하고 그 결정은 법치로 보장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등도,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이든, 국민이 선진국가 수준의 민주적 준법적 시민의 자질을 가지지 않는 한 해소할 수 없다.

금년 대선에서는 돈 선거가 없어지고 SNS의 흑색선전도 먹히지 않는 획기적 정치 선진화를 이루었다. 다음 대선 때쯤이면 아마 우리는 놀랄 만큼 뛰어오른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게 될지 모른다. 이 과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촉진시킴이 박근혜 정권의 시대적 사명이 될 것이다.

첫째, 박근혜 통합정치는 ‘공정한 법치능력’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법치(rule of law)라 함은 ‘누구도 법 위에 없고, 누구에게나 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 첫째 대상은 한국의 반(反)법치세력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 안보기반 등을 흔들려는 중복 집단과

없었다.

이번에 대통합의 명분으로 이들도 관용의 대상이 되면 법과 양식(良識)을 믿는 시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종국에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통합이 뒤편을 알아야한다. 둘째, 오늘날 대기업 재벌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검사관사를 줄기줄기 인척으로 엮고 온갖 연고(緣故)와 권세를 활용해 범법이 있어도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는 ‘특권층’이 있음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이들은 물론 앞으로 평등한 법치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나 패배자도 법치의 예외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생계형 구제를 통치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비판 못 하게 하는 여론의 금기(禁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 지원은 그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후에 부족한 수확을 보태주는 데 그쳐야 한다.

서민에게 불법반칙을 허용하는 것

4면에서 이어집니다.

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총투표인의 51.6%인 1577만 3,128표를 획득,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40.3%) 노무현(48.9%) 이명박(48.7%) 당선인이 넘지 못한 50% 득표를 훌쩍 뛰어넘었고 김대중 당선인의 1032만 6,275표보다 544만여 표가 더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48.6%의 반대가 있었다. 북한 연구 학자들은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를 찬양하며 적화통일도 좋다는 중복세력이 20년 전에는 20% 미만이었으나 18대 대선에서는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대(65.8%)~30대(66.8%)의 ‘의미 있는’ 적극적인 반대 원인으로 야당의 선전 선동, MB 정부의 실정 및 권력형 부패, 불확실한 미래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니다.

YS-MB 시대 전교조의 이념 교육을 받은 세대의 국가관 사회관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2010년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 강사 및 교수와 교장 교감 경력 없는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육감이 되어 전교조의 좌편향 정치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정책으로 학교 교육이 뿌리부터 뽑혔다. 좌편향 역사교육, 체벌 전면 금

지, 교원평가제 보류, 일제고사 반대 등으로 학교 학생 교사가 변했다. 한국 학생이 올림피아드와 국제콩쿠르 1위를 석권했으나 일부 도시 학교는 성폭행과 폭력이 난무하는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 교사들은 비행 학생을 봐도 ‘못 본 척 하고’, 도와달라는 약한 학생의 호소도 ‘못 들은 척 하고’, 학교 폭력 사건을 알아도 ‘모른 척 한다’고 피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원망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인돼 교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데다 좌파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 교사들은 적극적인 학생선도도 포기했다. 사교육과 전교조의 정치교육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 됐

지만, 많은 선생님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4년 연속 OECD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을 좌편향 세력의 정치 음모와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교육감선출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직선제 대신 공모제 교육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교육자치제 개혁과 함께 교원양성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고교평준화 제도개선, 교원노조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18대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를 바로잡을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개혁은 교육 관료와 교육학자의 손을 떠났다. 과감하게 수술할 집도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4]

“새 정치” 국회의원이 달라져야 한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정치판에서 무언가 명분을 구할 때 가장 많이 구사하는 슬로건은 정치쇄신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그래서 또 하나의 정치공학적 수사(rhetoric)이자, 대중을 현혹하는 수단이다. 지난 네 번의 문민정부 역시 모두 새 정치를 표방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에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앞으로는 일 원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떠났던 영국에서 돌아와 복귀의 명분으로 새 정치를 내세웠다. 그가 그때 만든 정당의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치를 위해 정치판의 뿌리부터 바꾸려 했다.

그는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기간당원제를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려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판을 혐오해 거리를 두면서 상권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은 정치를 멀리하고 간섭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모델이 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부패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의 아들들은 전부 감옥을 갔으며,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은 형들이 감옥에 갔다. 정치쇄신을 외치고 새 정치를 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출범했던 정부들이 하나 같이 썩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보스를 따라 모이고 이권을 쫓아 뭉치다 보니 권력을 잡고

나서 썩을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권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부패의 낙인을 찍었던 문민들은 군사정권처럼 보스만 썩은 것이 아니라 자식과 부하들까지 전부 썩었던 것이다. 자 연히 대중들은 정치판을 혐오하게 되고 정치인들을 백안시하게 됐다. 이러니 선거철만 되면 새 정치를

특별기고



전원채

·정치평론가
·변호사
·자유경제원장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신의 영달과 출세 욕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그래서 의원이 된 자들은 예외없이 건달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된 순간부터 오직 보스에 대한 충성만 생각하니 정책을 공부할 시간은 전혀 없다. 넷째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 최고수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정치를 쇠신하겠다는 이들이 내놓은 ‘새 정치’다. 그들이 새 정치를 말하는 게 어떤 철학이 배경이 된 게 아니라, 대중이 정치판에 가지는 혐오와 불신에 편승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니 그제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그래서 의원 숫자를 줄이자,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안들이 쏟아졌다. 대중이 정치판을 미워하는 건 부패와 무능을 때문이니, 부패를 끊기 위해 패거리 정치를 끝내고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국회를 하면 될 일인데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건 무슨 까닭인가? 일년 365일 의사당에 불 밝혀서 법안을 심사하고 행정부를 상시 감사한다면 누가 정치판을 나무랄 것인가? 누가 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할 것이며, 누가 굳이 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폐지하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자신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의원 연금이나 증액하고 의원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엔 콧방귀를 뀌면서, 인기에 영합할 뿐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불체포특권 같은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들에게 주는 온갖 혜택도 폐지해야 한다. 윤리위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일탈자들을 징벌하는 건 물론 의원소환제를 도입하여 타락하고 무능한 의원들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4]

상설 국회로 1년내 행정부 감시 의원소환제 도입 특권 폐지해야

외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대중이 정치판을 경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능을 때문이다. 우리 정치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능률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기업은 1류, 행정은 2류, 언론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인가? 우리에게선 선진국에 없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첫 째는 명색이 대학총장을 지내거나, 검사장과 법원장을 지낸 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것이다. 둘 째 지식인들의 그런 정치지향이

준다. 의원들은 후진국에나 있는 불체포특권부터 운전기사 봉급까지 온갖 특혜를 누린다. 이런 초호화 직업임에도 생산성은 최악이다. 아직 우리 헌정사는 예결산을 제대로 심의한 전례가 없다. 의원들 대부분은 법안의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에 나선다. 솔직히 말해 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TV가 중계하는 인사청문회다. 청문위원들은 자신들은 단 한 차례도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공직후보자들을 망신주느라 여념이 없다. 이 얼마나 희극적인가?

면역력은 내 몸의 수호천사

지난달 어느 날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내용은 ‘신바람 전도사 황수관 박사. 급성패혈증으로 별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줬었는데 증세가 있었지 며칠만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왕년의 조직폭력배였던 김태촌 씨도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급성패혈증이란 무엇인가? 급성이란 건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패혈이니까 폐, 허파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패혈증에서 패는 폐(肺)가 아니고, ‘부패(腐敗)했다 할 때 敗다. 즉, 말 그대로 피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실패했다, 온 몸의 피가 고장나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가 몸을 돌면서 몸에 영양분도 주고 나쁜 균도 없애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 피가 다 망가졌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 온 몸으로 퍼지고 전신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전신에 염증이 생긴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쉬거나 약을 먹으면 회복되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황수관 박사는 연령이 70이 다 되어서 면역력이 좋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침범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치병인 암도 생기고, 결핵도 걸리며, 감기, 알레르기,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이 오게된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은 건강의 키워드가 된다.

우리 몸에는 매일 1,000여 개 이상의 암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그럴까? 원자력병원 백남선 박사에 의하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고 말한다. 면역력이야말로 내 몸의 수호천사

란 것이다. 우리 몸에 침범한 병원체나 독소 등을 없애주는 자연 치유능력인 면역력은 돌연변이에 의해 생겨난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모두 다 암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쉬 피로하다 ▶입안이 자주 한다 ▶입술이 갈라진다 ▶감기에 잘 걸린다.

그러자면 우선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주범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먼저 단백질의 결핍인데 이렇게되면 우리 몸의 면역기관인 흉선이나 림프계통의 무게를 감소시켜 각종 병원균에 감염이 잘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비타민 A·C·E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 이들 비타민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식균세포 능력이 떨어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 아연이나 셀레늄 마그네슘 섭취량도 면역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상적인 세포활동을 막는 작용이 있어 면역기능을 떨어트린다.

또 담배 연기엔 4,800가지의 화학물질이 있고 이중 특히 1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은 우리 인체에 극히 해로운데 이것들이 정상세포를 공격해 우리 몸의 면역기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수면부족인데 잠자는 동안엔 뇌속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다. 따라서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습관이 나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의 발생빈도를 높일 수 있다.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기

세종시 비효율 '분권'으로 극복 할 때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에 바란다

총리실·기획재정부 등 세종청사 1차 이전 대상인 6개 부처의 입주가 완료 되었다. 중앙행정부처의 분산배치가 본격화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업무처리 혼란과 비효율 문제는 이미 예견 된 것이나 다름없다. 막상 이전에 놓고 보니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 이는 예견된 문제에 대한 준비부족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 결과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단순히 수도 이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라거나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 때문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행정관료의 나태와 무사안일 내지는 식견의 근시성과 경직성에 있다.

권력집중방지 더이상 안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위시한 일부 기관을 수도권에 남겨두게 된 것은 정치적 절충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 없었다면 단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분권을 향한 목적 가치가 없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분산 배치는 매우 무모한 결단에 속한다. 단군 이래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국정운영 체계를 한 번도 완화해 본 일이 없다는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더 이상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경우 엄청난 비효율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수직사회로부터 수평사회로 전환하는 정보사회에서는 분권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여러 번 있었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는 국회의 권력남용과 오작동도 그 원류를 찾아가보면 정당내부권력의 집권화에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당연히 분권 지향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이 일극적 중앙집권 체제는 이런 개혁을 외면하기 일쑤였고, 어찌 어찌하여 분권을 지향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그 운영양식이 결과적으로는 권력의 재집권화에 부역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분권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극약처방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리적 분산배치를 정당화 하는 기반이 되었다. 소프트 시스템의 분권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드 시스템의 분산 배치를 택한 것이다. 그러니 의식과 관행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 운영양식을 그대로 둔 채 청사의 지리적 분산배치에 조응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파열음이 건디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사의 지리적 분산 배치에 따르는 행정비효율을 극복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는 행정 운영양식을 지금의 집권체제에서 분권체제로 전환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철저히 운영하는 일이다. 마침 수도권에 남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은 기능적으로 볼 때

특별기고



박재창

·숙명대 교수
·행정학

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정보화 시대에 직접 국회에 나가 답변해야 국회를 존중하는 예의가 된다는 관행도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는 행정부 정보 시스템을 국회가 공유하도록 하여 직접 검색하도록 하는 행정정보공개 및 공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원래 국회가 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대행정부 예측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 보아야 할 과제다. 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행정부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수집되고 정리된 것인 만큼 의회의 시각과 관점을 반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는 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래도 남은 지리적 이격성에 따른 행정비효율의 문제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도를 높여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행정부서의 지리적 분산배치를 꿈꿀 수 있게 된 가장 큰 사회구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정보사회의 도래가 지리적 이격성을 극복해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차관회의 등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바일 행정운영체제, SNS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도 물론이다. 국회도 자체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을 화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자의회의 구현은 행정부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단행했어야 하는 일이다.

원격지 업무센터 확대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원격지 업무센터를 확대,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행정정보의 클라우드 체제를 강화 하면서 스마트 워크센터를 수도권에 분산 배치하는 경우 일종의 재택근무를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지리적 이격성에 따른 업무 비용지출을 극복하게 되는 적극적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차제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바일 행정체제나 SNS를 통한 융합 행정체제는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집행을 가능케 한다. 이런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정운영체제의 개혁 과제들은 모두 중앙행정부서의 분산 배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필히 채택했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행정운영양식을 고수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국회의 분원을 세종시에 세우자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도 두자고 하고, 세종시로 이전한 부서의 연락 사무소를 서울에 두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세종시와 서울 간 급행 KTX를 개발하지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정부청사의 분산 배치에 따른 물리적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는 모두 세종시로 중앙행정부서를 이전한 궁극적인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간과한 것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차제에 행정운영양식의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 정부청사의 분산배치가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도이자 목표라는 점을 마음 속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국문]

책임 총리제 도입-국회관계 재설정 행정 운영양식 급진적 개혁 시도를

국가운영을 위한 관리지원업무에 해당되는 부서들인 데 반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서는 국민의 먹거리 창출 같은 생활세계의 문제와 직결된 부서들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총리 간에 분야별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가운데 총리가 자기 책임 하에 제시된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식의 기획과 집행 간의 분업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여하튼 지금처럼 총리가 일일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며 국정을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 마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리적으로 이격화 되는 세종시 시대에서는 이를 감당할 길이 없다.

국무위원 국회대기 시정을

같은 이치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권력 특히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분립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미국에서는 행정부 고위관리가 국회의사당에 발을 들여 놓는 일은 거의 없다. 아니 금지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한 3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간부들 심지어 행정부처의 계장까지 총출동하여 국회에 대기하고 국회의원

영하기가 쉽지 않다. 의회가 자체의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럴 경우 세종시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실 중앙행정부서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마땅한 관행이다. 지방분권정부의 구현도 문제해결의 보조적 대안 가운데 하나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업무하중을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중앙행정부서의 지리적 분산배치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한 방안이 된다. 같은 이치로 규제개혁을 강화해서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일감을 줄여 작은 정부로 나가는 경우 정부의 업무 총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청사의 지리적 이격성을 극복하는 보완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권 하향조정을

행정 각 부처의 내부에서도 계서제의 원리에 따라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일원구조로 권력을 집중하는 현재의 업무수행 체제는 보다 더 의사결정권을 하향 분산하여 다원적 의사결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분권적 업무처리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위공직자의 결제를 받기

대선 공약 이행가능성 논조 엇갈려

새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5년간 200여 종에 135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 이행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에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에 인수위가 반발하면서 표면화한 것이다. 다수 신문들은 공약 이행이 중요하지만 증세 없는 세출 조정과 최대 6조원 증가로 예상될 뿐인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조달로 연간 27조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 수정’ 대 ‘시기상조’ 맞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믿고 찍었다면 이는 과거 고무신짜고 표를 바꾸던 후진적 관행이 좀 더 큰 물건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공약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약을 수정해야한다’는 보수계 신문들과 ‘공약 논란은 시기상조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좌파 계열로 논조가 나뉘었다.

공약의 목적은 정책목표 달성이다. 국가가 지불능력이 없는 공약은 공허하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매월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연금. 여기에 매년 14조원이 든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추정한 7조원의 2배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을 건드리겠다고 하다가 큰 저항에 직면했다. 이외에 4대 질병 무료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군복무 18개월 단축 등 돈 먹는 하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동아일보는 1월15일자 사설 ‘대선공약 한정된 재원 맞춰 구조조정 필요하다’에서 “가짓수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공짜로 해결해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보육 취업지원과 같은 선별 생산적 복지보다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여야한다”며 공약의 저주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선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계산해보고 선별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공약의 현실성 재검토해야’ 사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껏 마련하지 못한 공약

정부가 일부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

한 데 대한 인수위의 비판은 다수 사설들의 비판을 받았다. 김용준 인수위 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말라.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 어긋난다. 대선기간에 국민께 내놓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과거 관행에만 기대는’ 것으로 몰아붙이면 각 부처는 어떻게든 당선인 입맛에 맞는 방침을 만들어 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눈속임으로 덮어놓은 진짜 현실이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내며 나라 살림에 큰 부담으로 엇하게 마련이다. 공무원들이 박 당선인을 속이고, 결과

시해야 한다. 정부 부처들을 억박지른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무리한 공약으로 판단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증세라도 호소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부터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정권출범후 수정 가능” 주장도

반면 한겨레는 18일 ‘박 당선인, 공약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 돼야’에서 “복지 확대 공약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전면 무상보육 등이다.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이야말로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이 될지 말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정권 출범도 하기 전에 관료사회와 일부 매파 정치인들한테 휘둘러 공약 이행 의지를 꺾는다면 5년 내내 이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란 법도 없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증세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그다음에 국민 동의하에 공약을 일부 수정해도 늦지 않다. 대선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 축소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의 엄중함을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18일 ‘대선공약 조정여부 판단 지금은 아니다’에서 “무조건 공약에 집착하거나 추정 재원에 지레 겁을 먹고 선불리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박 당선인 측은 강고한 이행 의지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행정 부처는 타성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양시양비론을 펼쳤다.

인수위가 아무리 대선 공약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강변해도 노인연금 액수가 실제 소요액인 14조원의 2분의1로 축소해 잡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노인 인구수에 지급액을 곱하면 나오는 단순 계산을 뭘 어떻게 ‘정성껏’ 마련했다는 것인지 언론은 이 문제를 더 매섭게 비판했어야 했다. 아무리 당선자와 언론의 밀월기간이라고는 해도 초동생도 할 수 있을 이런 엉터리 산수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다. [국문]

보수지 “우선순위 정해 속도조절을” 일부선 “국민합의로 증세도 검토를”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8일 사설에서 “국책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 질환과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보건 복지 분야 3대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77조5,000억 원으로 새누리당 추계 34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봤다. 새누리당의 복지 비용 추계에 구멍이 많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13일에도 ‘朴 당선인, 공약 이행 어렵다는 정부 판단 돌아봐야’란 사설에서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이 복지 정책에 대해 재원상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 공약을 100%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썼다. 이는 본말 전도다. 공약 이행의 불투명성에 분노해야할 사람은 당선자가 아니라 그를 지지한 국민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다. 어떻게 돈도 부족한데 임기응변으로 표를 얻기 위해 불가능을 위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행이 어렵다면 언론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다그쳐야할 사안이다.

조선은 “당선인이 그런 정부 반응을

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이게 되는 셈이다”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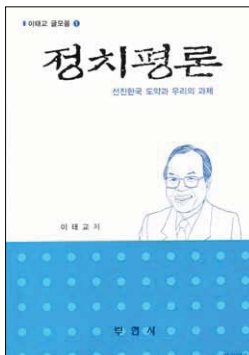
“실현가능성 논리로 설명”촉구

중앙일보는 14일 사설 ‘공약 이행은 심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에서 “안보·복지 등 대부분의 공약은 지극히 현실적인 실현의 문제다. 무리한 재원조달로 국가경제에 충격은 없는지, 지나친 복지로 개인의 책임감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은 당선인이 투표를 사흘 남겨두고 성급히 발표한 것이다. 부처의 주장이 틀렸다면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 연구팀을 통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논리엔 논리로 대응해야지 ‘불편한 심기’를 거론하는 것은 권위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18일 ‘박근혜 공약의 현실성 재검토해야’ 사설에서도 “정부가 추산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행예산은 새누리당 추산의 배에 달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약집 자체가 바이블은 아니다. 무리한 공약을 실현하려다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빚는다면 그게 더 심한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14일 “인수위 스스로 재원 조달에 대한 큰 그림부터 제

회우들이 펴낸 新刊

이태교 회우 ‘정치 평론’

보실장의 안내로 장충동 최고회의 의상공관에서 박 정희의장을 만났던 장면을 묘사한 그의 글을 보면 그동안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검소하고 소탈한 인간미와 생활철학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국민을 해방시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국정철학



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일보 장기영(부총리)사주에 관해 “정말 장사주는 왕초였다. 화를 내야 할 때 웃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대인이었다”고 회상한다.

저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반도 주변 미국,

중국 등 4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한 차원 높은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우측통행,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고장 난 비상전화 등 기초질서 확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서 말미에 첨부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는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각 분야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귀중한 자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이 자료를 국정운영에 정책아이디어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문]

한기호 (본회상담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부동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태교회우가 지난 연말 정치평론집을 펴냈다. 그가 한국일보, 중앙일보 정치부기자로 최고회의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취재했던 특종과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문에 기고했던 정치 분야의 글을 모은 것이다. 정치평론집의 백미는 역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민정에 참여하기 위해 예편하기 전날 밤(1963년 8월 29일)에 저자가 박의장과 가진 단독회견내용과 이후락실장에 대한 얘기, 한국일보 장기영사주와의 인연이라 하겠다. 저자가 당시 이후락공

‘정치 평론가’ 언어유희 너무 심하다

새로운 직업군 생긴듯

“텔레비전에서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라는 천진스런 동요 속에서 자란 탓인지 최근 들어 TV 화면에 얼굴을 내밀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말을 뿐만 아니라 이 방송, 저 방송에 같은 사람이 물리기도 한다. 심지어 인기 연예인처럼 같은 시간에 겹치기 출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 전 이런 경향이 기승을 부려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런 현상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웬걸 선거 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선거 전에 대량으로 양산된 정치평론가와 시사평론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교나 연구소에서 본연의 강의와 연구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고 그 식상한 평론을 더 이상 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방송의 수요가 늘어난 탓인지 이른바 평론가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직업군이 된 감마저 든다.

적어도 방송에 출연해서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의 전개나 예견과 예측까지도 보여주어야 제대로 된 평론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들이 여전히 평론가란 이름을 달고 이 방송사, 저 방송사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사실 하도 많은 정치적 변혁과 술수를 맞본 우리 국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증명하듯 아마도 평론가라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고도로 훈련된 정치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평론가를 양산하고 계속해서 화면에 노출시키는 것은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방송시간을 시사, 뉴스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한다는 종편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비스가 아니라 2% 안팎의 시청률이라도 유지하고 제작비를 줄이는 최상의 방안이 바로 여러 사람을 스튜디오에 불러 놓고 정치적 상황의 분석과 전망 또는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의 유희와 정치적 상황의 회화화인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종편에 이들 평론가라는 분들의 1회 출연료가 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1시간 짜리 드라마 한 편 제작에 몇 억 원씩 하는 것과 비교하면 종편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일정률의 시청률도 보장해주고 제작비도 대폭 절감하고 종편 출범 명분의 하나인 다양성도 보장한다는 증명도 되니 종편에서는 놓기 아까운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상파 방송사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서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종편을 쫓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이제 새 정부 총리도 지명되고 조각

도 마무리 될 터이니 더 새롭게 분석하거나 예견할 상황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새 정부 출범과 그동안 평론가들이 분석하고 전망한 올바른 정치가 제대로 펼쳐지는지, 정치적 개혁은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회두를 채찍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그리고 이른 바 평론가들은

각자의 학교나 연구실로 보내 더욱 정진시켜 다음 기회에는 정말 국민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평론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심어주고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모방자살 부추길 우려

지난달 6일 자살로 생을 마친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가

방송시평



오건환

·본회 회우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방법 등의 보도를 자제하는 ‘자살 보도 윤리 강령’을 2004년에 공동으로 제정하고 총동이나 모방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윤리 강령의 준수율을 조사한 한 통계를 보면 방송은 1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나마 신문은 26%를 지킨 것으로 조사돼 이 윤리강령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뒤 두 달 동안 자살자는 전년과 다음해 자살자보다 평균 60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인의 자살이 자살 총동을 심하게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진실씨가 자살한 뒤에는 무려 두 달 동안 1,008명이나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고 최씨가 숨진 해 8월에 최씨처

유명인 자살보도 윤리강령 안 지켜 지나친 음성변조 뉴스신뢰도 훼손

자살하자 방송사는 저마다 주요 기사로 집중 보도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모든 방송 뉴스는 대통령인수위 출범이란 톱 뉴스에 이어 ‘야구인 조성민 자살, 화장실에서 목 맨 채’란 사실 기사와 ‘비운의 가족사. 최진실, 최진영에 이어 조씨까지’란 두 개의 대형 리포트를 처리했다.

KBS의 경우 각각 1분 32초씩 방송됐고 MBC는 2분씩, 그리고 SBS는 1분 38초간 방송됐다. 방송은 호재를 만난 듯 장례식까지 거의 매일 후속보도를 대대적으로 계속했고 고인과 가족을 위로하고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시사, 연예 프로그램에서 비운의 가족사를 시시콜콜 파헤치는가 하면 이른바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 연예인들이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자신들도 자살 충동을 느꼈었다는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해서 시청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물론 조성민씨의 자살은 충격적이고 크나큰 비극이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방송이 자살 기사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그 기사가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OECD 국가 중 제일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심각성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고 특히 연예인이나 인기인의 자살은 그 영향이 우려할 정도라는 자살 통계도 나와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의 구체적

뷰이이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이크 화면 처리 문제는 추후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번 호에서는 음성변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잦은 음성변조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음성변조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11일자 KBS 9시뉴스에서는 뉴스 앤 이슈를 통해 ‘버려지는 아이들-미혼모 대책은...’을 중요 기사로 보도했다. 세 기자가 보도한 리포트에서 2명의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버린 불가피성을 녹취해 음성을 변조해서 보도했다. 또 유기된 아기를 처음 발견한 경찰관의 음성도 변조했다. 음성을 변조하면 음성을 제대로 들 수 없어 방송사는 친절하게 자막처리를 하고 있어 시청자의 시청을 도와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 미혼모들의 말을 변조 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은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음성을 변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버려진 아기를 처음 발견한 경찰관의 음성을 구태여 변조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경찰관은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모범적인 임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의 말을 왜 변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어지는 기사에 ‘잘못된 정치관행, 의원 묻지 마 외유언제까지’란 기사에서 의원 보좌관 2명이 외유의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을 녹취해 변조 처리했다.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정치 개혁 대상의 하나를 지적하는 보도이고 보좌관은 엄연히 국가의 공무를 담임하는 공무원으로 의원이 공무로 행하는 출장의 당위성 여부를 밝히는 일이라면 음성을 변조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당 보좌관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보좌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녹취한 음성 변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필요한 변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보자는 것이다. 특히 변조를 심하게 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쓸데없이 음성변조를 많이, 자주 쓰면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뉴스의 신뢰도에 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조를 하되 듣기 어려워 자막처리를 하는 방법을 차라리 변조임을 밝히고 대리 녹음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지 하지 않을까?

어느 쪽이 뉴스의 신뢰도에 덜 흠이 가는 방법일까 생각해 보기를 제언한다. ☞

출연자 보호에 도움안되기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한다. 요즘 방송 뉴스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인터

언론-정계 넘나든 인생 ... “주어진

“정치개혁 생각만 바꾸면 간단”

李鍾植(81) 본회 원로회우의 정보는 회원수첩 너 줄짜리 약력 외에 아는바 없어 막막했다. 인터넷 서핑 결과 단서를 포착했다. 연합통신 전무로 언론계에 복귀한 프로필 기사다. 제목은 ‘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운명론자’(경향신문 1983년 4월 16일자 2면)

〈“역시 언론계는 마치 신부가 천정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안겨 주는 것 같아요” 정치적 격동기였던 70년대에 국회의원(9, 10대)으로 활동하느라고 잠시 언론계를 떠났다가 복귀한 이종식 연합통신 전무의 ‘귀소의 변’이다. 고령산. 고대 정치과 졸. 1959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장, 편집부국장을 지냈다. 데스크시절 부원들에게 늘 취재 결과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뛰었느냐는 과정을 중시해 왔다. 그래서 비록 낙종했음장정 열심히 뛰었다면 술을 사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 일선기자 시절 많은 사건을 취재 했지만 경무대 앞 발포사건,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 취재 등을 가장 잊을 수 없다고. 지금껏 운명을 개척하기보다 주어진 쪽으로 살아 온 편. 부인 황병남 여사와 자주 등산을 즐기는 애처가. 승호 군 등 1남 1녀. 취미는 동전수집. 일본인 친구가 보내주는 신간을 즐겨 읽는다.〉

지난 1월 10일 낮 코끝을 알싸하게 하는 매운 날씨에 프레스센터 지하식당에서 만났다. 이종식 회우가 가져온 약력 한 장과 메모 해간 프로필 기사를 앞에 놓고 2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카랑카랑한 경상도 사투리로 막힘없이 대답한다.

-정치부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격동기를 지켜봤다. 12·19 대선을 지켜 본 소회는?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양분 됐다. 40대의 표심을 두렵게 여겼는데 50대의 반란으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 앞으로도 2030세대의 인구는 줄고, 5060세대의 증가로 보수 성향은 늘어날 것이다. 진보정권은 반대만 했지 성장 동력의 어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산국가와의 외교수립도 보수 정권이 열지 않았는가. 보수 세력 결집으로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박근혜 당선자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벽증이 있어 보인다.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무리를 범하지 않는다. 매사 신중하게 판단한 뒤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내리고 신념으로 밀어 붙인다. 아버지 스타일과 비슷할 것 같다.”

-새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씩만 든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유세 때 공약을 발표하며 ‘노력하겠다’고 아니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은 지킨다는 이미지 때문에 공약 따로 행동 따로 갈 수 없는 게 부담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 무렵 ‘청와대는 감옥입니다. 모두 퇴근하고 집사람하고 둘만 남으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5)

회우초대석

李鍾植

· 전 조
· 제9,1
· 전 방

인터뷰 : 글·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필연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운명은 있는 것 같다”고 운명론을 펴는 이종식 원로회우.

정치부 기자 → 국회의원 → 통신사전무...결과보다 과 4·19취재하며 ‘전문시위꾼’ 존재 느껴...등산-헬스클럽

적막강산도 그런 적막강산이 없다’고 언급했듯이 청와대부속실은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만큼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청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마련하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곳에 근무하면서 외부 인사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시한 뒤 “특히 귀를 넓게 열어줘야”한다고 강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답을 유보했다가 메일을 통해 “아버지를 의식하지 말고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혀 신중함을 드러냈다.

-정치개혁은 요원한가?

“정치개혁은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다”고 명쾌하게 말한다. “쪽지에산, 선심 예산, 예산 통과 후 의원 외유는 오랜 관행이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높아졌는데 정치권의 관행은 변하지 않아 비난받고 있다. 의정활동 때 예결위원을 해봤지만 여야 원내총무는 많은 쪽지를 가지고 다녔다. 계수조정 소위 때 주무 장관은 쪽지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새해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호

텔에서 비공개로 심의했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관행의 고리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심의과정에서 지역구사업도 공개적으로 토의하여 완급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회의록을 남기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했으나 제일 뒤진 것이 정치다. 정치를 전쟁하듯 손자병법을 동원하고 거짓과 술수로 일관하여 정치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정치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1969년 이종식 회우(가운데)가 정치부장 시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등나무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심윤택 청와대비서관.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2만원에서 올해 3만원 올라 15만원이다.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월 120만원)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신 운명 같아요”

선일보 정치부장, 연합통신 전무이사
0대 국회의원, 전 방송위원회 위원
송위원회 위원

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나는 두 가지 다 받는다. 올해 3만 원 올랐다는 것 처음 듣는다. 전직 의원 지원금은 여론이 좋지 않으면 바뀌야 한다. 그런데 헌정회 회원 가운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남은 재산 선거에 다 털어 넣고 떨어져야 그만두는 직업 아닙니까?”

“살다보니 필연이 있는 것 같다”
-운명론을 믿습니까?

“숙명론자는 아니지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필연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운명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1950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 제1육군병원 위생병 모집에 친구와 함께 응시하여 입대했다.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송되어 육군 제2사단 창설사에 배치됐다. 중앙동 옛 서울상대 자리다. 교실 안에 책상 4개가 놓여있고 아무 곳이나 가서 이름을 쓰라고 했다.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앞에 보이는 책상에 관등성명을 기록했고, 나는 안쪽에 배치된 책상위에 써 놓았다. 나는 사단사령부에 배속됐고, 그 친구는 32연대로 배치되어 참전 중 전사했다. 생사가 엇갈린 운명이다.”

이 회우는 ‘정치부 기자가 된 것도 국회의원이 된 것도 필연적 운명’이라고 설명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고려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정 중시하는 덕장 잡다니며 건강관리



아래서

졸업을 앞두고 학점이 괜찮았던지 김상형 교수가 ‘경성방직 갈거야, 동아일보 갈거야?’ 하기에 동아일보를 가겠다고 했다. 외신부를 찾아가라고 해 들렀더니 올해 수습기자 모집이 있는데 공채에 합격하면 기자생활이 더 유리하니 응시하라고 했다. 그에 앞서 조선일보 제2기 수습기자 채용시험에 실력평가 삼아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으나 합격 사실을 몰랐다. 동생 친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형님 축하합니다”하기에 알았다. 수습기자 합격자들을 오전에 소집했는데 부랴부랴 오후에 참석했다.

수습기자 시절, 각 부서를 두 주일씩 순회할 때 정치부에 배치됐고, 마침 국회가 열려 의원 발언 요지를 기록하여 조용중 조세형 선임기자에게 제출했다. 그 때 잘 보았는지 정치부에 배속됐다. ‘그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타 신문사의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으나 조선일보 외에 가본 적이 없고 정치부 이외 타 부서 취재를 해 본 적이 없는 ‘절름발이 기자’라며 웃는

다.

“정계 진출도 마찬가지다. 5·16 군사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출입기자로 선발됐다. 기자실도 없이 시민회관 계단에 앉아 발표문을 받아썼다. 나중에 명칭이 바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출입하게 된 것이 유정회 국회의원 선임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정계진출의 뜻이 있었는지요?
“내 꿈은 정치가 아니라 제호 밑에 이름이 들어가는 편집국장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숙명 아니겠는가”
-데스크 시절은 덕장이었던 같습니다.

“나서는 성격이 아니다. 부장 때도 기자들에게 출입처 간사를 맡지 못하게 했다. 취재원에게 신세지는 일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간관계도 두루뭉술리하게 어울리는 게 좋는데 그러지 못했다. 유별나게 절친한 사람도 없지만 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술자리에서도 사람 평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프로필 쓰는 것도 꺼렸다. 내 기준에 맞춰 남을 평한다는 게 어디 쉬운 것인가”

“남북조절위 평양취재 못잊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4·19 당시 취재비화는?

이 회우는 “1960년 4월 19일 경무대 발포사건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위 전문꾼’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가 통의동 파출소 앞 현장에 갔을 때 동국대생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다. “경무대로 가자”며 학생들이 상수도 공사를 위해 파헤쳐 놓은 돌을 던지고 경복궁 담까지 진출했을 때 경찰이 담장을 향해 최루탄을 쏜 것이 작전 미스였다. 군중들은 총을 쏜 줄 알고 “와~” 함성을 지르며 밀고 나갔다. 멈춰선 전차(지상 궤도전차)를 앞세워 전진하여 경무대 방향 바리케이드마저 밀어버렸다. “대학생들이 전차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누군가 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전문 시위꾼이 있다고 느꼈다”는 것.

시위대가 경무대 앞까지 진출했을 때 바리케이드 앞에는 소방차 2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를 가장 먼저 넘어 간 것은 구두담이들이었다.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다가 도망가자 또 누군가가 소방차를 기가 막히게 몰더라. 송고를 하려고 인근 미장원에 들어가 전화 좀 쓰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신문에 사에 전화를 거는 순간 ‘타~탕’ 총소리가 들려 밖으로 뛰쳐나왔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 때 누군가 나타나 부상자 위에 태극기를 덮는 것을 보고 ‘시위 주도세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 와중에 누가 태극기를 준비했겠는가? 시위군중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신문사 깃발이 달린 지프에 부상자를 싣고 삼청동 육군통합병원에 내려주고 회사로 갔다”고 회고한다.

-전문 시위꾼들은 누구라고 봅니까?
“그건 지금도 모르겠다”
4·19의거는 12년에 걸친 자유당정권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⑫

잠을 잘자야 건강하다

나이드는 이 가운데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성 2명 중 1명, 남성 3명 중 1명이 변비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비는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노인성 변비는 대부분 활동량이 줄어들



이광영

·본회 노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식욕부진, 수면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고령자 변비의 80%정도는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문제가 된다.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다. 식사를 제때에 제대로 하되 섬유소

가 풍부한 식품을 들도록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사과와 단감 등을 껍질째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밥맛이 없다고 대충 먹게 되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아침 공복에 한두 컵의 물은 물론 낮에도 자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변의가 생기면 곧 화장실을 가도록 하되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변의가 있어 화장실에 간 경우 배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곧 일어나지 말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배변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좌약이나 관장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 나와 있는 특수 식이섬유 나이가 하제 등을 사용할 정도이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임의로 쓰다보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비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데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수 있다. [국문]

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나 전문 시위꾼들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평양회담 취재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란봉초대소가 회담 장소였고 기자단은 대동강변 평양여관에 투숙했다. 숙소에서 회담장 가는 길목 청벽루 담장에 ‘花月玉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기에 안내원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평양기생이라고 한다. 그 옆엔 평양감사와 부마도위 등의 이름도 새겨져있다. 당시엔 기생과 어울린 것을 풍류라 여겼기 때문인 같다. 서울엔 평양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사진을 찍게 차를 잠시 세워 달라고 부탁 했고 안내원도 동의했으나 운전기사가 그냥 가더라. 승용차에서 내려 기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하자 안내원이 멋쩍은 듯 웃더라.”

취재를 마치고 평양서 개성까지는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개성에서 판문점까지 오는 벤츠 승용차에는 윤양중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타고 왔다. 노동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는 데 안내원이 화들짝 놀라며 “신문을 접으면 김일성 수령님의 얼굴이 접히니 펴서 가져가라” 했다는 것.

세가지 신문 꼼꼼히 읽어

이종식 회우는 1988년 연합통신 전무이사를 끝으로 언론계를 떠났다. 그 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1990~1993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1998년)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성곡문화재단과 방일영문화재단 이사로 노익장을 과시한다.

-건강관리는?
“1982년 담낭제거 수술 이후 요즘도 매주 등산을 다닌다. 1993년부터 일주일에 4, 5일 헬스클럽에 나가 걷고 뛰고 쪽 해오고 있다.”

-술과 담배는?
“2008년 심장 동맥이 막혀 그 때 끊었다. 지금도 담배 냄새 맡으면 생각난다. 술은 소주 몇 잔 가볍게 마시는 정도다.”

-일과는?
“늦잠을 자는 편이다. 8시쯤 일어나 세 가지 신문을 꼼꼼히 읽는다. 아침은 가볍게 과일로 때운 뒤 점심 식사 후 헬스클럽에 나가거나 지인들을 만난다.”

33세 때 중매로 만나 결혼한 黃柄南(74)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씨티은행에 근무했던 딸 紹英(46)씨는 치과의사 尹重校(48)씨와 결혼. 아들 丞浩(44)씨는 검사. [국문]

원로 언론인 역량 결집... 높아진 위상 실감

대한언론인회 27차 정기 총회 ... 2013 예산 - 사업계획 확정

대한언론인회는 1월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 27차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원 299명(위임 145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는 먼저 정운종 상임이사의 회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김호기 감사의 감사보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105,083,220원, 특별회계 85,786,000원 도합 1억 9천 1백여만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8% 수준으로 후생복지 사업을 비롯 주요 사업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홍원기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언론인단체답게 대한언론인회의 위상제고와 역량결집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이며 18대 회장 임기 1년을 앞두고 올 한해가 명실 공히 거듭나는 대한언론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종 상임이사는 이날 2012년도 업무현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2012년도 회무보고

대한언론인회 1년을 회고하면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 찬 한해였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은 대한언론인회의 오랜 전통과 높은 대외 신인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업을 손꼽는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 하고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2집을 속간했으며 본회가 주관한 문화역사 탐방과 야외수련 말고도 언론진흥재단 행사(문화역사 탐방, 영화 감상, 송년음악회 등)에 많은 회우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가 할 만한 업무 추진 성과였다. 또한 6·25 참전언론인회의 역동적인 운영에 힘입어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과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다는 사실은 원로언론인들의 정적인 한계를 초월한 생동감으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국산화력시범, 인천상륙작전 재연,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 참가, 백령도 시찰 등에 6·25 참전언론인과 본회 임원진이 다수 초청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 대한언론인회의 높아진 인지도를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6·25 참전언론인회 활동 돋보여

이와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원로 언론인들의 애국심 넘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두 차례에 걸친 대토론회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일깨운 것은



회우들이 대거 참석, 성황을 이룬 대한언론인회 제 27차 정기 총회.



정기 총회 참석 회우들.



인사말하는 홍원기 회장.



격려사를 하는 이해복 고문.

원로 언론인들의 격조 높은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매일 1일자로 발행되는 ‘대한언론’은 권위 있는 정론지로서 열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사단법인체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광고 수주로 제작비를 커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세법을 존중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결과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밖에도 통상적인 회원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사무실 분위기 쇄신으로 모든 회원들이 소통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광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 못다 한 이야기’ 2집 출판에 이어 ‘이해복 고문 평전’을 간행한 것은 본회 출판 사업의 전향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한 예라 하겠다.

수입 감소에도 흑자 예산 집행

끝으로 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음에도 재정 규모 1403,457,880원(사진인간애상 기금 제외)을 확고히 유지 했고 2011년도 보다 총13,021,181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은 회계 상의 투명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재정의 건전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아울러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 지원을 전제로 인터넷 신문 창간계획을 세웠지만 여의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를 대폭 혁신하여 뉴스전달 체계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미디어정보시대에 걸맞는 대한언론의 뉴스정보전달 체계를 축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언론인회는 2013년도에도 기왕에 통상적으로 수행한 후생복지 사업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를 전제로 신규 출판사업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 하

는 한편 대한언론인회의 위상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올 해는 특히 복지기금 이자 감소와 광고 수주 격감으로 인해 전반적인 긴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가능한 한 지출억제 및 축소로 건전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 1) 회원복지 친목사업
 - 의료비 지원, 경조비 지원, 건강 강좌, 언론인장(추도식)
 - 체력단련 문화탐방 합동고회연.
 - 동호회 활성화(산악회, 기우회, 서도회)
- 2) 6·25 참전언론인회 활동
 - 상반기 중 ‘6·25 참전기’ 출판 (예산지원 요청 중)
 - 휴전 60주년 기념 전적지 답사
 - 6·25 참전명패 추진
 - 기타 국가안보강화를 위한 활동
- 3) ‘대한언론’ 발행
 - 기획사 운영으로 재원 확보
- 4) 대토론회
 - 본회 예산 및 언론재단 지원
- 5) 대한언론상, 사진인간애상
 - 대한언론상 시상 (10월중)
 - 사진인간애상 (4월 7일 시상)
- 6) 합동 고회연
 - 2013년도 고회 회우(1943년생 27명)
- 7) 회원수첩 발행
- 8) 회원저술문고 내실화
 - 회원 저술 서적 비치 공간 확보 (서고 등)
- 9) 홈페이지 활성화
 - 홈페이지(www.kjclub.co.kr) 회원 가입 후 검색하면 각 언론사 홈페이지 검색가능, 회원광장란 활용
- 10)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 NIE교육 특임강사 추천(언론재단 요청시)
 - 출판사업(소요 예산지원 받아 ‘실록 언론인의 길’ 3집 발행)
 - 문화탐방(4회), 명화 감상(4회), 송년음악회
 - 도서실 집필실 공간 활용
- 11) 신규 출판사업
 - ‘언론일로, 그 찬란한 불꽃’ (가제)
 - 대한언론에 게재된 ‘실버파이팅’ 원고를 집대성 단행본으로 출판 (예산지원 전제)
 - 참전언론인회 6·25 참전기 발행 지원
- 12) 대외협력 사업
 - - KBS 제공 실시간 뉴스서비스 (현재 실시 중)
 - - 각사 사우회와 유대강화
 - - 광고주 집중 섭외
- 13) 기타
 - 대한언론 2007년 이후 발행분 제책 보관 (2007년 11월 이전분은 축쇄판으로 보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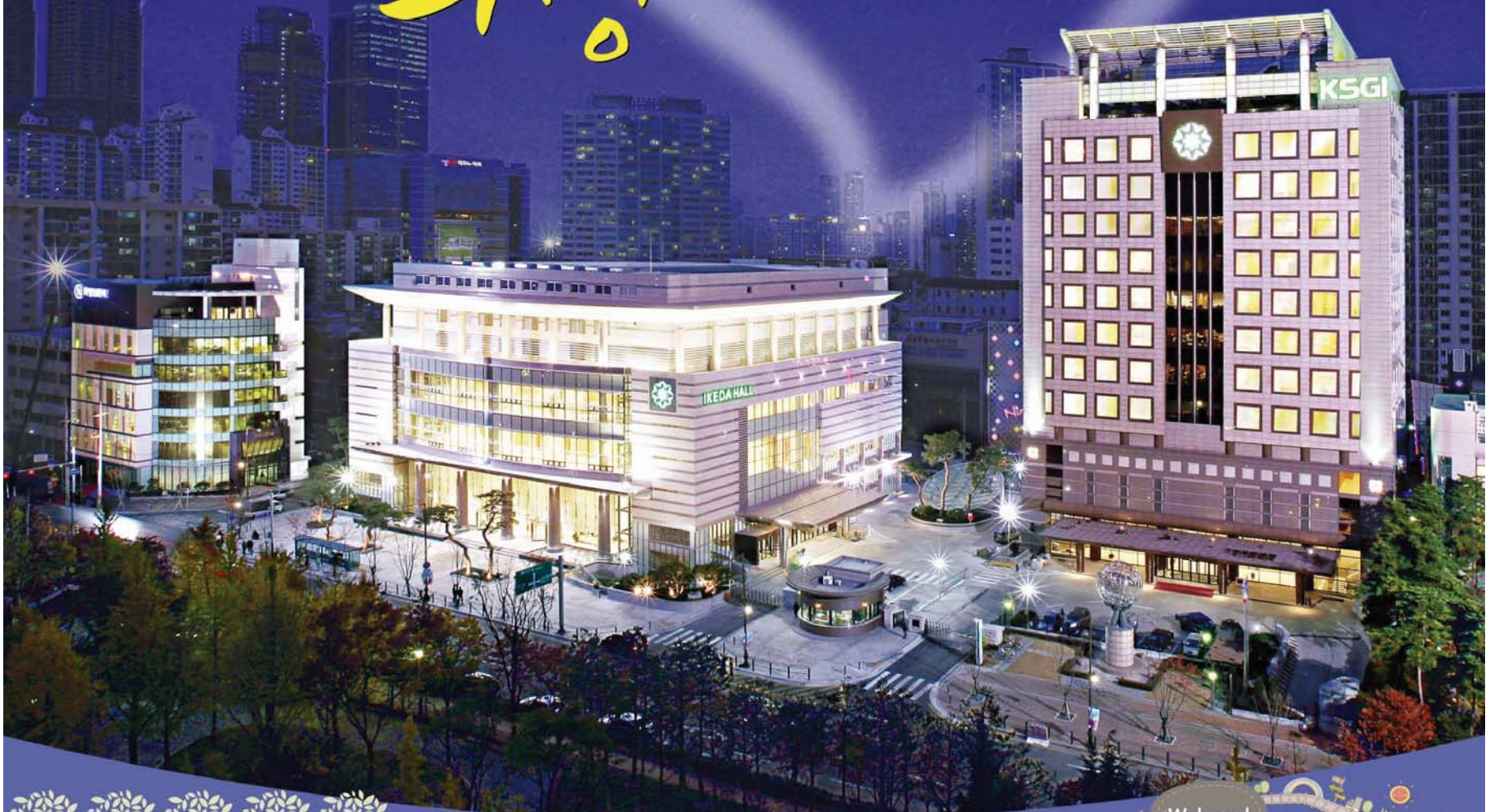
SGI는 대승불교인 니치렌대성인
불법을 기조로 평화·문화·교육 운동을
실천하며 행복이라는 가치를 창조하는
단체입니다.

 **정당 한국SGI**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54
대표전화 1566-1118
www.ksgi.or.kr
신도림역 2번출구

행복을 희망

을 만들어요



언제나 함께하는 한국SGI



2013년 새해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국민 행복 시대’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임기 중에 반드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고 선거캠프에 ‘행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행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다.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 위에는 ‘국민 행복 신고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국민 행복 시대’라는 말이 선거 기간 중의 단순한 캠페인 코드가 아니라 무언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이란 말의 어원은 영어의 happiness, bliss 또는 pleasur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일본 학자들이 근대 행복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제레미 벤담의 책을 번역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이나 즐거움을 맞볼때, 만족스럽거나 보람을 느낄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 흔히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마음의 경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행복이란 말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정서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이어서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행복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 모양새나 무늬나 색깔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나 만족도도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행복한 사람,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다워서 행복한 사람, 학문에 몰두하면서 지식탐구에 행복한 사람, 예술, 창작으로 행복한 사람, 스포츠 스타가 되어 행복한 사람, 그리고 종교적 신앙으로 행복한 사람 등 누구나 제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개개인이 행복의 주인이고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복이 나만의 개

‘행복론’ 小考



정기정

·분회 부회장
·전 마산 MBC 사장

인적 행복인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인가, 또는 정신적 행복인가, 물질적 행복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인류의 행복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수없이 추구되고 논의 되어 왔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이후의 스토아 학파들 그리고 로마시대 초기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고대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행복의 문제를 인간 본성과 자아를 찾는 데 두었다. 즉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다분히 철학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 이성과 중용의 실현을 행복으로 보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보다 감성에 입각한 유물론적 쾌락주의를 주창하며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정(부동심)을 최고의 행복으로 규정했다.

행복론이 금욕설과 쾌락설로 두 개의 큰 흐름을 갖는 것도 그 연원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스토아 학파의 원조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실체를 찾지 말라. 행복은 찾을수록 불행해진다. 중용을 지키며 이성적으로 살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행복은 절제와 인내이다. 마음에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성취를 욕망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이루어도 욕심이 많으면 그 값은 작아지고 적게 이루어도 욕심이 적으면 그 값은 커진다. 따라서 많이 이루려는 것 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은 마음을 비울수록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고대 철학자들의 행복론에 관한 대표적 두가지 견해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행복론을 다룬 학자로는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벤담, 힐티, 러셀 등이 있다. 이들 중 임마누엘 칸트와 제레미 벤담의 도덕론은 미 하버드대 샌들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강의를 단골로 등장하는 대립적 두 주제이다. 칸트의 도덕론은 스토아 학파의 ‘세계이성’에 가까우며 벤담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산업혁명기에 생긴 영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의 영향을 받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을 뜻한다. 벤담은 근대 행복학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저서와 이론들을 내 놓았으며 그는 “행복이란 쾌락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개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의 6가지 요소로 건강, 일, 사랑, 열의, 노력 그리고 체념을 제시하고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세계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넓히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적대감을 품지 말고 애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적 문호들의 행복론도 다양하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고뇌하지 않는 삶, 욕구가 충족 되는 삶,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며 “불행은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볼프강 폰 괴테는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흘리는 땀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즉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법학, 의학, 신학 등 모든 학문을 마스터 하고도 메피스토틀의 꾀에 빠져 속세의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다가 결국 좌절과 파멸 끝에 덴마크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땀이 삶의 보람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극치라고 소리친다.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즈는 그의 자전적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다 유치장 신세를 지게된 미코버의 입을 통해 “월 수입이 20파운드 인데 지출이 19파운드 19실링 6펜스면 행복이고 지출이 21파운드면 불행이다. 적은 것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소시민들의 소박한 행복론을 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인 조르바’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포도주 한잔, 밤 한톨, 허름한 화덕 그리고 바닷소리처럼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라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옛날의 그 집’이란 자작사에서 “늙고 나니 참 마음이 편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가분하고 행복하다”고 노년의 고독을 행복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기대와 촉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 행복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

경향신문

사우회보 48호 간행

경향사우회(회장 김명수 · 분회 회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사우회보 48호를 간행했다. 타블로이드 12면으로 제작된 이번 회보에는 2012년도 경향사우회 송년모임 소식을 비롯,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다. 특히 대한언론인회가 두차례에 걸쳐 발간한 ‘실록-그때 그현장 못 다한 이야기’와 ‘이해복 평전’이 밀도 있게 소개됐고 6·7면에는 ‘소공시대 정동시대-선후배 편집국장 대담’이 통면으로 실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담에는 조용중 분회 원로회우(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와 김명수 회장, 이대근 편집국장, 맹태균 분회 홍보출판위원장이 함께했다.

국민일보

신년하례식 친목다져

국민일보 전직 사우회 모임인 KMC(Kukminilbo Media Club)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여의도 세양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고 친목을 다졌다. 함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사우들

사우회 소식

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일보 임순만 편집인은 회사의 발전방향 등을 설명했다. KMC는 송년모임 대신 해마다 신년 하례식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4기 임원진 분회 회우 대거 선임

한국일보 사우회(한우회)는 지난 1월 15일 제4대 회장으로 제재형 회장을 선임하고 4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고딕체는 분회 회우)

•역대회장 : 초대 이원흥 2대 권혁승 3대 김충한

•고문 : 김기병 김성우 김종규 김중하 김중배 남재희 박현태 봉두완 손일근 송정숙 엄병윤 오인환 윤임술 윤종현 이광표 이순기 이 형 임흥빈 장명수 정태연 조두흠 최병렬 최영철 최정호 최종수 홍순일

•감사 : 홍원기 박 실

•부회장 : 김명식 김재설 김진동 김해도 김후란 박용배 송호빈 안병찬 윤세일 이기흥 임종건 정홍택 한기호

•자문위원 : 공대식 김시복 김영열 노진환 박영덕 박재권 박제욱 안택수 유일연 유지호 윤익한 윤창중 이광영 이동복 이성준 이억순 이영희 이용훈 이재승 이준기 이태고 이태영 임영정 광모 정일화 최우석 최종수 홍길황 소웅

•운영위원 : 계창호 김남현 김윤재(건이) 김중기 김홍태 명동원 문은모 문창재 박병윤 배기철 성인숙 소재필 손형모 신상식 예창해 유문찬 윤국병 임현배 최상연 최상태 최종열 한건주

•전문위원 : 강대형 김경태 김두근 김병무 김석성 김영선 김주연 김진걸 김훈 나용경 남영진 노항기 민영기 박승평 박희자 설희관 성의경 손기상 신수균 안중관 오인문 이상욱 이상우 이성춘 이영흠 이재무 정덕교 정훈 조원영 주삼중 홍광희 홍재서 황원갑

•편집위원 : 김승웅 김윤찬 맹태균 문창재 배기진 신우재 이민호 이형구 최성범 홍선희 홍윤표

•사무총장 : 문창재 재무간사: 이형구

코리아 헤럴드

사우회 임원개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의 전직사우 모임인 헤럴드사우회(회장 윤익한 · 전 코리아 헤럴드 주필 겸 전무)는 지난 1월 21일 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대한언론인회 상담역이기도 한 윤익한 사우회장은 이날 이영만 사장이 마련한 이 모임에서 송두빈 전 회장(사진 오른쪽), 이종광 전 사무총장과 윤석홍 관리국장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로패를 증정했다.



(2기 임원진 명단 · 고딕체는 분회 회우)

•명예회장 : 송두빈

•감사 : 이경식 최귀조

•부회장 : 민병일 이종광 이풍희 한동희

•자문위원 : 김광전 김용발 윤용호

•사무총장 : 최용웅 ☞



8시가 달라졌다

MBC

뉴스데스크

매일 저녁 8시

溫故知新

선덕여왕을 다시 본다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다. 언니 천명공주의 아들 김춘추의 나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된다. <삼국유사> ‘기이’ 태종무열왕 조에 따르면 김춘추는 661년에 59세로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그가 태어난 해는 602년이 된다. 선덕여왕이 즉위한 것은 632년이니, 당시 김춘추의 나이는 만 30세가 된다. 천명공주가 김춘추를 낳았을 때 나이가 15~16세라면 동생 선덕공주는 13~14세, 천명공주가 늦어도 20세에 김춘추를 낳았다면 선덕공주 또한 한두 살이나 두세 살 적었던 18세 안팎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 나이는 적어도 43세, 많으면 48세쯤으로 추산된다. 결혼 적령기가 15~16세였던 1500년 전 당시에 여자 나이 쉰 살이 가까우면 ‘당연히’ 할머니였다. 그러나 여왕의 등극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즉위 한 해 전인 631년(진평왕 53년)에 이찬 칠숙(柒宿)과 아찬 석품(石品)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두 처형당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아들이 없는 진평왕의 아우인 백반(伯飯)과 국반(國飯) 두 갈 문왕도 당연히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만한 위치였다. 또한 백제의 무왕(武王)도 진평왕의 사위로서 신라 왕위계승권을 강력히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선덕공주는 부왕 재위 시부터 자기 세력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을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부왕의 뜻이지만 선덕공주가 폐위된 임금 진지왕(眞智王)의 아들인 김용수(金龍樹)·용춘(龍春) 형제를 번갈아 남편으로 삼은 것도 친위 세력 구축을 위한 포석의 일종일 것이다. 또 <삼국유사>와 <화랑세기>에 나오는 김춘추와 김문희(金文姬)의 야합 사건도 선덕공주의 지지세력 확보를 위

한 포석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김문희는 뒷날의 문명왕후(文明王后)이니, 김유신(金庾信)의 누이요, 문무왕으로 즉위하는 김법민(金法敏)의 어머니이다.

선덕여왕은 즉위 이후 자신이 신라사상 최초의 여왕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더욱 절감했을 것이다. 즉위년 1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즉위 사실을 알리고 조공했으며, 이듬해 7월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외교활동이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도 김부식만큼이나 여자를 우습게 보는 자였다. 그는 “신라에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임금으로 내세웠느냐”고 노골적으로 깔보았으며, 신라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모욕적인 언사로 무안을 주었다. 그래도 당이 강적 고구려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신라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선덕여왕을 진평왕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봉작을 내렸으니 선덕여왕 즉위 3년 만이었다. 하지만 당 태종의 여왕을 무시하는 생각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선덕여왕 12년(643년) 9월에 고구려와 백제의 거듭되는 침공을 하소연하며 구원병을 청하려 보낸 신라의 사신에게는 이런 기막힌 소리까지 했다.

“너희 나라가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으므로 이웃 나라가 이를 멸시하여 마치 주인을 잃고 도적을 불러들여 편안한 세월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나? 내가 나의 친척 한 명을 보내 너희 나라 임금을 삼고자 하노라. 그래도 혼자서 임금 노릇을 할 수는 없을 터이니 마땅히 군사를 팔려 보내야겠지?”

신라 사신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풀이 죽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선덕여왕은 이처럼 즉위 초부터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기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불법(佛法)의 힘으로 민심을 통합하여 안정을 기하고자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재위 3년 정월에 분황사의 낙성을 기해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그 이듬해에는 영묘사의 낙성을 보았다. 또한 재위 4년 3월에는 황룡사에서 백고좌(百高座)를 열어 ‘인왕경’을 설법토록 하고, 중 100명에게 도첩을 허락했다. 진골 출신 고승인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구법을 위해 당나라로 건너간 것도 그해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쉴 새 없이 침범하여 하루도 국경이 조용한 날이 없는데 도성에서는 술한 재물과 인력을 기울여 불법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거창한 토목공사를 계속하니 자연히 불평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덕여왕 16년, 재위 마지막 해인 647년 정월에는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의 반란이 일어났다. 비담은 그 지난해 11월에 이찬에서 국무총리격인 상대등으로 승진한 인물인데, “여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명활산성을 근거지로 일으킨 비담과 염종의 반란은 한때 기세가 높았지만 알천과 김유신 등의 활약으로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어쨌든 선덕여왕은 즉위 초부터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기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불교의 힘으로 민심을 통합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다. 또한 준군사조직인 화랑도를 적극 후원하여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선덕여왕이 리더십이 부족하고, 총명하지 못하거나, 의지가 약했다면 16년간이나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요즈음 임기 5년간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은커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한 못난 남성 대통령들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여자와 남자를 떠나 국가 최고지도는 출중한 리더십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취임으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맞게 되었다. 앞으로 5년간이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善德女王)을 되돌아보게 된다. 선덕여왕은 어떤 인물인가. <삼국유사> ‘왕력’편 신라 조 제27대 선덕여왕 첫머리에 이렇게 나온다.

-이름은 덕만(德曼)이다. 아버지는 진평왕(眞平王)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麻耶夫人) 김씨이다. 성골(聖骨)의 남자가 없었으므로 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배필은 음갈문왕(陰葛文王)이다. 인평(仁平) 갑오년에 왕위에 올라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

여기에서 재위기간 14년은 16년의 잘못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만팔을 임금으로 세웠다고 한 반면, <삼국유사>에는 성골의 남자가 없으므로 (성골의) 여자인 덕만공주가 왕위에 올랐다고 했다. <삼국유사>에 진평왕은 아들 없이 세 명의 공주만 둔 것으로 나온다. 다른 두 명은 천명공주(天明公主)와 선화공주(善花公主)이다. 선화공주는 <삼국유사>에만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천명공주는 뒷날 진골의 첫 번째 임금으로 즉위하는 태종무열왕 김춘추(金春秋)의 어머니이다.

선덕여왕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을까.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 선덕왕조 끝에 이렇게 썼다.

‘…사내는 높고 계집은 낮은 것이다. 어찌 늙어빠진 할망구가 안방에서 튀어나와 국정을 좌우함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잡아 일으켜 임금 자리에 앉게 했으니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나 있을 일이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고루한 남존여비 사상의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내도 여자인데 이런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망언을 했다. 김부식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늙어빠진 할망구’를 여왕으로 내세웠을까. 선덕공주가 여왕으로 등극할 때에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있었던) 유부녀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대로다.

선덕여왕의 생몰 연대는 어느 사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왕의 나이를 추정할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

관훈클럽 총무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관훈클럽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총회를 열고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을 제60대 총무로 선출했다. 오 신임 총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며 1988년 한겨레 창간 멤버로 참여해 도쿄 특파원, 사회부장, 편집국 수석부국장, 디지털미디어본부장, 출판미디어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총무의 임기는 1월 11일부터 1년간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형일 MBC 보도국 부장, 이기수 경향신문 주말기획팀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관훈클럽은 또한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과 신임 총무 취임식 및 관훈 언론상과 최병우 기자 기념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언론가 소식

조선일보 개인연금제 도입

조선일보가 신문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을 신설했다.

조선일보 개인연금제도는 앞으로 20년 후 최종적으로는 사원 1인당 매달 100만원씩의 개인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매칭 펀드’ 방식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지난 연말 55억원의 기금을 출연, 해마다 수입금의 일부를 계속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인연금 제도는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회사 50%, 본인 50%씩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이다. 즉 개인연금 납입액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자협회보 1월 9일자 보도)

KBS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난해 12월 31일 남산송신소, 10초전

부터의 카운트 다운과 함께 새벽 4시 정각 아날로그 방송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로써 아날로그 방송이 51년 만에 종료되고 고품질의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다. 김환영 KBS사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KBS가 디지털방송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경쟁력 회복 다짐

김재철 MBC사장은 신년사에서 “재작년에 이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전체 매출 1조 8천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1천 8백억원, 시청률 8.2%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경쟁력 회복을 통해 열정 MBC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김사장은 특히 “올해에는 반드시 ‘열정 MBC’ ‘열정 대한민국’으로 뚝 뚝 뚝

쳐 전체 매출 1조 8천억원 이상, 영업이익 1천 3백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대표이사에 김수길씨

중앙미디어그룹은 지난 1월 15일 임원급 인사를 단행하고 JTBC 대표이사(부사장급)에 김수길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했다. 김 대표이사는 1977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경제부장,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편집인, 부발행인 겸 신문제작 총괄, 방송설립추진단 총괄본부장, JTBC 제작총괄부사장을 지냈다.

언론 재단 경영이사 김성수씨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12월 28일 신임 경영이사에 김성수 전 연합뉴스 편집담당 상무를 선임했다. [필자]



회우동정

가나다순

프레스리안 뉴스·조선일보와 신년대담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회우= 지난 1월 1일 인터넷 신문인 프레스리안 뉴스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신년대담을 한데 이어 지난 1월 21일자 조선일보 Why면 '이한우의 聽談(청담)'에서 '향후 민주당의 진로' 등에 대해 소견을 피력했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문 청(전 KBS 기획조정실장)회우= 지난 1월 15일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 위원장은 KBS기자 출신으로 기획조정실 정책주간, 위성방송 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광고회사 베컴의 회장직을 맡고있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은 문 청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학계·광고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됐다.

TV조선 '판'에 출연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회우= 지난 1월 16일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 출연,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과 '개발연대의 지혜와 용기'를 주제로 대담했다.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신년회



송용식(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회우= 1월 30일 오후 6시 서울 하얏트호텔 2층 남산 1룸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신년회 개최.

MBN 출연 국내외 정치전망



안병훈(전 조선일보 부사장)회우= 지난 1월 17일 MBN TV 정운갑의 집중분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말한다'에 출연, 향후 정치정세전망 등 시국대담.

저서 '괴물제국 중국' 관련 인터뷰



여영무(뉴스엔피플 닷컴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우= 지난해 11월 11일 KBS라디오1 '명사들의 책읽기'프로(1시간)에 출연, 신간저서 '괴물제국 중국'과 관련해 인터뷰한데 이어 12월 30일 뉴스Y(연합TV)에 출연. '여영무가 말하는 괴물제국 중국'에 관해 인터뷰(30분간). 여 회우는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뉴스엔피플 닷컴에 '국민대통합과 자유통일의 시대를 열자-5천만 민족에게 삼가 드리는 말씀'을 기고한바 있다.

KBS 사보에 신년사



이형균(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편집고문= 1월 4일자 KBS사보에 '시청자에게 행복을 안겨주세요' 주제로 신년사 기고.

충북협회 산악회 고문



정운종(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상임이사=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회장 안병길)는 지난 1월 3일 임원인사에서 정운종상임이사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정운종이사는 그동안 제천산악회와 경향OB산악회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는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널 아카데미 개설



최귀조(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이사= 지구촌포럼(회장 최귀조)은 오는 2월 25일 '저널 아카데미'를 개설, 젊은 세대를 대상(3개월 단위, 1기 약 20여명, 수강료 무료)으로 기사 작성, 논설문 작성, 편집이론과 실제 등 10개 강좌로 국내 저명 중견 언론인을 초빙, 강의한다. 모든 경비는 지구촌 언론포럼에서 지원한다.

회우 가족 동정

원로작가 초대전 출품



한영옥 여사(홍원기 회장 부인)= 1월 18일(금)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예술인촌 공립미술관에서 열린 '2013 인제빙어

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에 '솔뜨라, 변주곡' 등 2점을 출품했다.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원로작가 17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한영옥 여사는 서울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한울회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귀제 회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 FOAL안 501-201(우 135-872)

신정호 회우= 서울 은평구 불광동 635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1104-704(우122-741) ☎ 391-5642 011-270-9222

이배영 회우= ☎ 010-9367-6379

이보길 회우= 서울 용산구 후암동 미주아파트 2동 305호

전의식 회우= 서울 노원구 중계로 195 신안아파트 101-1202 ☎ 02-932-6529

조덕동 회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번지 극동아파트 102동 901호

☎ 010-5247-4711

홍용수 회우= ☎ 010-5348-8116

'이혜복 평전' 미 하버드대학 도서관에 비치

대한언론회가 지난해 11월 편찬한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 평전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 이 책을 출판한 '청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지난 1월

3일 이 책의 구입을 청미디어에 문의를 해와 그 다음날 두권을 납품했다는 것이다. 대한언론회가 편찬한 특정인의 평전이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 이사회 2013 예산 심의

대한언론인회는 1월 18일 오전 11시 제134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27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2013년도 예산 결산(안)을 심의했다. 일반회계 105,083,220원, 특별회계 85,786,000원 포함 1억 9천 1백여만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 줄어든 액수다.

이날 이사회는 또한 2013년도 종합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



산조달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본회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임원진이 앞장서기로 했다.

본회 회장단 2013 신년단배식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계사년 원단을 맞아 회장단을 중심으로 단배식을 갖고 덕담을 교환했다. 이날 단배식에는 제재형 고문, 홍원기 회장, 김은구 윤익한 한기호 상담역, 김성배 윤기병 정기정 이태영 부회장, 송호빈 감사, 지용우 논설고문, 이형균 편집고문, 문명호 주필, 성낙



오 편집위원장 정운종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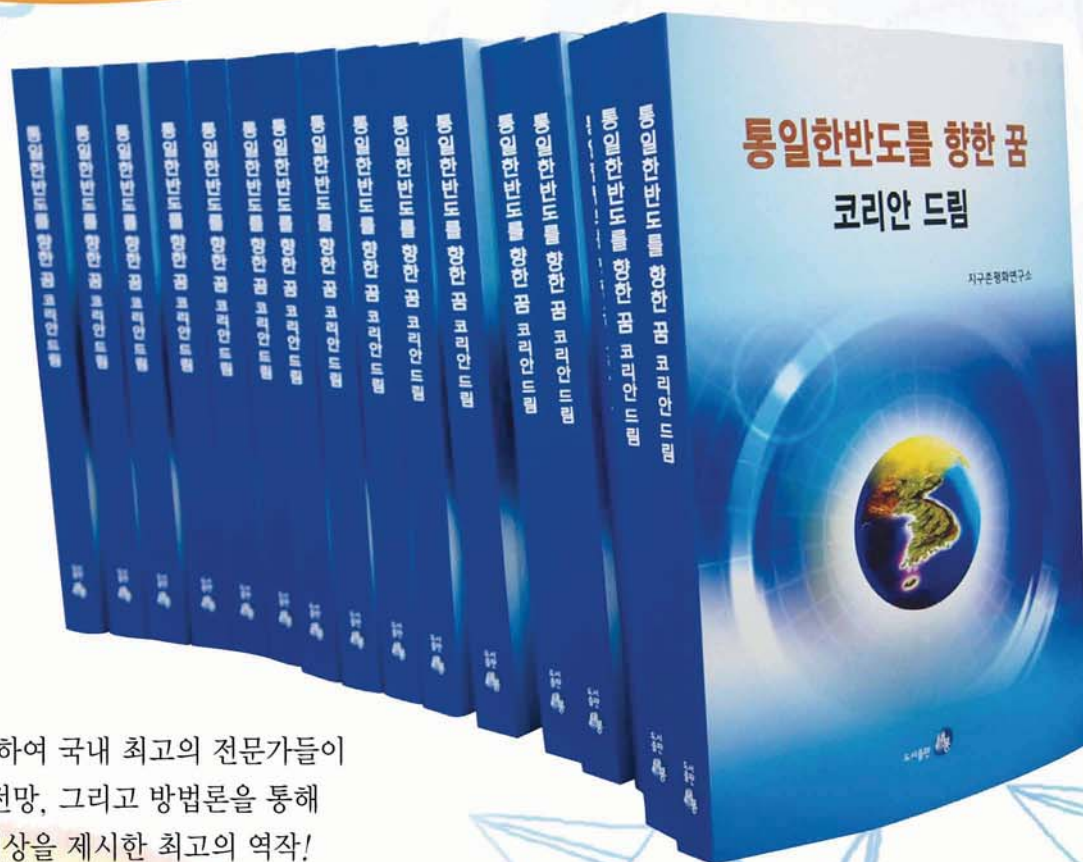
강병우(13)	문준철(13)	이준우(13)	조재린(12,13)
강진형(13)	박범진(13)	이창열(13)	최귀조(13)
고귀남(11,12)	박석흥(13)	이형균(13)	최선록(13)
고수균(13)	박승구(13)	이흥기(12,13)	탁성만(13)
고재봉(13)	박승채(13)	임덕규(13)	한강수(13)
공대식(13)	박연호(13)	전의식(13)	한양인(13)
구만완(13)	백일진(13)	정덕교(13)	한영도(13)
국기일(13)	서옥식(14)	정운종(13)	호천웅(12)
권도홍(13)	소재필(13)	정창기(13)	홍순일(13)
길윤석(13)	송경섭(13)	조규만(13)	홍원기(13)
김 집(12,13)	송선무(13)	조규석(13)	황봉구(13)
김관태(13)	송충섭(13)	조규진(12)	황선용(13)
김규문(13)	신정호(13)	조덕동(13)	
김담구(13)	심재복(13)	조봉균(13)	〈1월 28일 현재〉
김두근(12,13)	안상현(13)		
김병모(13)	여구만(13)		
김성배(13)	원종선(13)		
김영택(13)	유무정(13)		
김용발(13)	윤기로(13)		
김의수(13)	윤기병(13)		
김창구(13)	윤양중(13)		
김철진(13)	윤홍섭(13)		
김충한(12)	이규섭(13)		
나용경(13)	이병천(13)		
노영순(13,14)	이육용(13)		
노철용(13)	이윤래(13)		
도준호(13)	이재승(13)		
맹태균(13)	이정원(13)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통일조국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한 **최고의 역작!**

통일한반도를 향한 꿈
코리안 드림



◇공저◇
곽태환
고유환
서보혁
이장희
장의관
조민
홍현익

값 : 15,000원

대북 및 통일 정책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전망, 그리고 방법론을 통해
통일조국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한 최고의 역작!
한민족 최고의 블루오션이 될 통일한반도를 향한 꿈!
코리안 드림을 이 한 권의 책에서 만나 보십시오.

발행처 : 지구촌평화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1 한컴빌딩 별관 2층

전화 070-8950-3090 팩스 02-6455-5546

펴낸곳 : 도서출판 태봉 전화 02-2274-0383

주문처 : 070-8950-3090 총판 : 명문사 02-319-8663

“국산품 사랑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2012년 외국인관광객 1100만명 유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우수 국산품 판매를 통해 면세시장 내 국산품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국산품의 수익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쓰여집니다. 면세점 국산품을 애용하는 여러분이 글로벌 관광한국을 만듭니다.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국산품의 명품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